

10년 넘게 미분양 방치 목포 옥암지구 대학부지

준주거지역 용도변경 재추진 '시끌'



목포 옥암지구 대학부지 전경. 목포시는 시민들의 여론조사를 거쳐 대학부지 19만6793㎡ 중 3분의 2(4만여평)을 준주거지역 등으로 용도변경 절차를 재추진하면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대학부지와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아파트 단지. 1500세대 주민들은 조망권 침해와 난개발을 우려하고 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10년 넘게 미분양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목포 옥암지구 대학부지가 다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목포시가 지난 2011년 주민들의 반발로 중단됐던 용도변경 절차를 재추진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목포시는 시민들의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대학부지 19만6793㎡(5만9530평) 중 3분의 2(4만여 평)가량을 준주거지역 등으로 용도 변경해 매각할 계획이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목포시의 대학부지 용도변경 재추진 배경과 시가 실시한 여론 조사에 문제점은 없는지 짚어봤다.

◇용도변경 재추진 속내=목포시는 사실상 대학부지가 불가능한 점을 들어 용도변경을 통해 활용도를 높이고 3000억 원에 달하는 부채를 갚기 위한 대안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명분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시는 여론조사 카드를 꺼냈다.

도시개발 사업단(이하 사업단)은 '대학부지는 옥암동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목포시민 전체에 관한 문제'라며 전 시민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지난해 20일까지 3개월에 걸쳐 1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어 전문가와 대학교수를 대상으로 활용방안에 대한 2차 설문조사를 지난해 31일 마무리했다.

문제는 여론조사를 일조권이나 난개발의 이해당사자인 한국 아델리움, 골드 클래스, 한라 비발디 1500여 세대를 주요 대상으로 삼지 않고, 시민 전체로 확대한 것은 수요 조사 결과를 목포시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려는 '꼼수'가 아닌 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이번 조사는 시민을 대상으로 자연녹지를 용도변경해 의료시설을 비롯해 체육시설, 상업시설, 공공복지시설, 문화시설 등 5가지 시설을 설치하겠다는 의견을 묻는 것이 주요 골자다.

시민 4000명을 대상으로 1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867명이 응답했다.

목포시 두차례 걸쳐 여론조사 활용도 높이고 부채 청산 필요 부지 60% 용도변경 매각 계획

"설문내용 하자 등 여론몰이 꼼수" 조망권 침해·난개발 등 반대도

이 가운데 옥암·부주동 주민은 229명이었다. 응답자 87.3%가 '개발 필요성'에 찬성했으며 '불필요하다'는 의견은 6.6%에 그쳤다. 필요시설 우선순위는 문화시설이 34.7%로 가장 많았고, 편의시설(20.1%), 교육시설(18.1%)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현재 자연녹지 지역인 대학부지가 준주거지역 등으로 용도 변경될 경우 건폐율은 현재 20%에서 50%로, 용적률은 100%에서 400%로 높아진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부분은 조망권 침해와 난개발을 우려한 대학부지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비싼 분양가로 입주한 만큼 당초 목적대로 부지의 활용을 주장하고 있다.

최종 설문조사 결과는 24일을 전후해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사업단 관계자는 "시민들이 반대하는 개발을 하지 않겠다. 고도제한과 시설제한은 정확하게 두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3월 초 목포시의회 보고와 부주동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대학부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용역을 진행할 계획"을 시사했다.

대학부지 용도 변경이 이뤄지더라도 관련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최소 15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실제 토지 매각은 내년 하반기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망이다. ◇여론조사 문제점은 없는가=목포시의 여론조사 용도변경의 당위성과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설문 문항에서부터 이 같은 속내가 엿보인다는 게 시의회 노경운 의원의 주장이다. 지난 3일 실시된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노 의원은 "설문 내용이 어려워 읽어봐도 된 말인지 모르겠다"고 털어놨다.

또 그는 "주민 설명회라면 목포시가 안(案)을 가지고 나와 주민을 설득하고 동의를 구해야 하지만 구체적 안이 없어 형식적 절차를 거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시장이 나서 대화를 해야 설득력이 있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어 시의회 여인두 의원은 "설문조사가 실제로 '대학부지 용도변경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가 아니라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이곳에 무엇이 필요하고, 무슨 시설이 들어오면 좋겠는가'라는 수요조사에 초점이 맞춰져 많은 사람의 동의를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목포시가 잘못된 방향으로 조사를 했다. 따라서 이번 설문조사는 변별력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목포 문화연대·목포 환경운동연합·목포 포럼 등 시민단체들도 최근 성명을 내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옥암지구 자연녹지에 대해 주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개발계획을 하지 말라고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했다"며 "목포시는 여론조사(설문조사)에 의한 여론몰이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처럼 '부지활용과 부채청산을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과 '잘못된 여론조사'라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수요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개발 자체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많지 않아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목포=임영춘·고규석기자 lyc@

목포고용청 일자리 창출지원사업 국비 71억 투입

목포 고용노동지청(지청장 황선범)이 인력양성에서 취업까지 각 지역실정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목포 고용노동지청은 전남도, 목포시·여수시 등 기초자치단체, 각 사업수행기관 등과 29개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 지원협약(사진)을 체결하고 이달부터 본격 사업추진에 들어갔다. 이번 사업에는 총 71억 5900만원의 국비 지원과 16억8100만원의 지자체 대응투자가 이뤄진다.

고용노동부에서 선정한 '광역 자치단체 지원사업'에는 전남도의 '안착 2040 플랜트산업 고숙련 전문인력양성' 등 10개 사업이 선정됐다. 특히 '창조 ICT(정보통신기술) 융합메이커스 프로젝트'는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목표 실현을 위해 청년층의 ICT융합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ICT융합 인재양성 거점 브랜드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 지방고용노동관에서 선정한 '기초 자치단체 지원사업'에는 도내 시·군의 19개 사업이 선정



됐다.

지역별로는 목포시의 '일스톱 트레이닝을 통한 글로벌 상생 해양플랜트 기술인력 양성사업', 여수시의 '스마트 플랜트 엔지니어 인력양성 교육' 등 10개 계속사업과 영암군의 '대불 국가산업단지 고용대상별 종합 취업연계사업', 나주시의 '나주 혁신도시권 일자리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사업', 화순군의 '공동주택 경비직 고령근로자 환경개선 지원사업' 등 9개 신규 사업 등이다.

황선범 지청장은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해 지역 구직자에게 안정된 지역일자리 제공함으로써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

목포상의 22대 회장에 김호남 현 회장 추대

목포 상공회의소 제22대 회장에 김호남(근화건설(주)회장·사진) 현 회장이 추대됐다.

목포 상공회의소는 최근 영암 호텔현대에서 재직의원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2대 임원 선출을 위한 임시 의원총회를 열고 현 회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제22대 회장에 연임하게 된 김호남 회장은 당선 인사를 통해 "기업현장 속으로 들어가는 목포상회의가 되겠다"면서 "취업정보 교육센터를 만들어 지역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남해안 고속철



과 방위산업 유치, 목포 컨테이너 부두건설의 3대 사업을 성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김 회장은 당선에 확정된 직후 지역내 100세 이상 장수 여섯 가정을 방문해 문안인사를 드리는 것으로 새 임기를 시작했다. 취임식은 별도로 갖지 않을 계획이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목포대 약학과 24명 전원

약사 국가시험 합격

목포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 제1회 졸업예정자 24명 전원이 최근 시행된 '제66회 약사 국가시험'에 합격했다.

2011년 전남 최초로 신설된 목포대 약학과는 132명의 학부생과 6명의 대학원생, 12명의 교수로 내실있는 교육으로 지역 보건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한동실 약학대학장은 "약학과 첫 졸업생 전원이 국가시험에 합격했다. 학생들의 뜨거운 열정과 교수진의 헌신적인 지도, 학교 차원의 체계적 지원이 삼위일체가 돼 일궈낸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이론교육과 다양한 실무실습교육을 통해 지역에 봉사하는 우수 약사 인력을 양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대는 24일 오전 11시 목포대 박물관에서 학위 수여식을 갖는다.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

공원자원 훼손 5월까지 집중단속

다도해 국립공원 서부사무소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서부사무소(소장 최종관)는 불법 산불 조짐기간을 맞아 공원자원 훼손 예방과 불법·무질서행위 근절을 위한 사전예고 집중단속제를 오는 5월 31일까지 실시한다.

서부사무소는 불법 해안가와 탐방로 일대에서 자주 발생하는 하수오, 춘란 등 야생식물 채취를 비롯해 토사력(몽돌)채취, 취사·휴먼행위 등 행위를 집중단속한다.

국립공원내 자연자원 훼손행위 적발시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휴먼행위 위반시에는 과태료 10만원(중복 적발시 최대 30만원)이 부과된다.

송도진 해양자원과장은 "국립공원의 건전한 탐방문화 조성과 공원자원 보호를 위한 탐방객 및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기자 ssllee@

시내지국

광천	366-8375
광남	222-9440
남부	852-0175
동광	264-2012
동명	222-9054
동부	225-6001
문흥	267-4748
백운	673-4698
봉신	675-5530
북광주	525-3761
상무	372-2352
서광주	369-0583
송하	676-8605
신안	512-1732
양산	571-7658
오치	266-7601
용봉	522-7752
우산	512-8116
운천	371-9818
원곡	961-2339
중양	222-1896
중흥	224-8604
진철	673-1600
진단	973-2900
충장	224-8212
치평	376-6511
동암	682-8112
하남	959-1500
화정	375-9862

지방지사

광산	062)944-0444	남원시	063)626-1601
군산시	063)467-2500	순창군	063)653-0444
정읍시	063)531-5544	서울보급소	02)313-5962

이농인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3년

광주일보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대(代)를 이어 읽는 신문

광고문의_062 227-9600 | 신문구독_062 220-0551 | 예향구독_062 220-0550